

國·公立大學과 私立大學의 均衡 발전

鄭 址 雄

(서울大 農業敎育科)

지난 해에 大學의 發展的 運營을 위하여 登錄金 引上의 불가피성이 제시된 후, 大學은 自律化·民主化의 거센 바람과 함께 커다란 진동을 겪고 있다. 특히 과거같으면 文教當局의 간섭이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던 大學들이 그 妥當性이 公認되기는 하였지만, 등록금을 인상하기 어려운 처지에 서게 되면서 大學의 運營과 學生福祉의 제공에 있어서 發展을 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私立大學들은 私立大學 敎育의 效果도 國家發展에 國·公立大學과 똑같이 기여하였음을 인정하여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하므로 생기는 缺損 부분을 文教當局에서 補償·支援해야 한다는 要求를 切實하게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상 大學敎育이 公益性을 띠고 있고 올림픽을 개최했던 우리나라의 經濟發展 수준을 인정할 때 이러한 요구는 어떤 형태로라도 反映·受諾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리라.

私立大學에의 公的 支援 요구와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은 첫째로 지금까지 國·公立大學에 대한 政府의 支援이 있기는 하였으나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하면 너무나도 貧弱했다는 점, 둘째로 大學敎育의 혜택은 國·公·私立大學을 막론하고 基層大衆보다는 有産少數集團에게 더 많이 간다고 하는 두 가지 事實이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수준의 敎育을 받는 大學生들이 國·公立大學을 다니느냐 아니면 私立大學을 다니느냐에 따라 不利한 學習 및 就業 條件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며,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敎授들의 경우에도 그 待遇나 身分保障 및 敎權에 있어서 公認된 衡平性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시설이나 보수 면에서 私立大學 사이의 격차는 매우 심하여 國·公立大學보다 낮은 수준의 大學이 많지만, 또 반대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敎育 投資를 많이 해 온 일부 私立大學의 敎育活動에 대한 公的 支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많은 私立大學들의 財源이 淸약하여 그 財源을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의 敎授를 확보하고 좋은 敎育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해 주려면 支援의 규모가 커야 할 터인데 현재와 같은 정부의 文教豫算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더욱 답답한 것은 私立大學과 격차가

큰 저렴한 등록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國家 및 地方行政機關으로부터 상당한 支援을 받는 현재의 國·公立大學들도 필요한 교수 인력의 확보나 敎育 施設 및 환경 조성 등이 미흡한 것은 일부 취약한 私立大學과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支援을 받고 있는 서울大의 경우도 그 빈약성은 이루 다 말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새 건물을 짓고 綜合化하여 이전한 지 십수 년밖에 되지 않은 冠岳 캠퍼스의 경우가 醫大와 齒大가 있는 연건 캠퍼스와 農大와 獸醫大가 있는 水原 캠퍼스에 비하면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施設이 不足하고 不實한 것은 심각하기까지 하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비교나 기업체 빌딩이나 연수원 시설 등과 비교해 볼 때도 우리 政府로부터의 大學敎育에 대한 投資나 支援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일부 기업체에서 이러한 大學敎育의 빈약성을 돕고자, 특히 첨단 과학 부문에의 敎育 시설 지원과 研究費 제공을 하고 있어 커다란 發展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나 分野別 均형보다는 自産業 部分에의 적용 가능성에 치중한 나머지 같은 大學校 안에서도 分野間에 심한 격차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大學의 發展으로 인한 혜택이 분명히 기층 대중보다는 유산 계층에게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先進國으로 도약하려는 우리의 처지에서 나라의 발전에 어떤 부문보다도 큰 몫을 담당하는 大學敎育을 振興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첨단 과학과 기술 부문에서는 물론 모든 學問에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각계 각층의 人間 資源과 能力은 최대한으로 開發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研究는 더욱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大學이 상당한 정도로 등한히 해 온 소의 집단과 基層大衆에 대한 社會奉仕의 기능을 大學의 公式的 機能으로 制度化하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國民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國·公立大學의 경우에는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소외되기 쉬운 分野에 대한 均衡의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며, 知性人들의 創造的 產物을 쉽게 國民大衆에게 보급시킬 수 있는 社會奉仕의 義務를 必然的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機能의 확장이 大學의 發展을 고조시키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또 이제까지 國·公立大學에서 하지 못한 이러한 사회 봉사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던 일부 私立大學의 活動은 정부의 지원과 격려로써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私立大學에 대한 政府의 財政的 支援의 필요를 認定함과 동시에 國·公立大學에의 지원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는 私立大學이 政府로부터 支援을 받게 될 때 자칫 國·公立大學에의 지원이 위축되거나 않을까 하는 利害打算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마치 약전 골목의 여러 약국들이 많은 고객을 유치하여 상승적 利得을 볼 수 있듯이 國·公·私立大學 모두가 보다 劃期的인 發展을 하게 되는 轉機가 이루어질 수 있거나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문교 당국이 政府 豫算을 배정하는 관장 부서로부터 大學의 發展을 위한 特別資金을 받아내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일단 配定된 전체 文敎豫算 가운데 大學敎育 財政의 比重을 높이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실현 가능한 문교 당국의 大學 振興策은 大學敎育 協議體와 함께 힘을 합하여 國·公·私立을 불문하고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韓國大學發展基金’과 같은 財團法人體를 설립하는 일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基金에는 정부의 出捐은 물론 大學의 發展으로 인하여 직·간접의 혜택을 받는 産業體와 篤志家들의 出捐이 함께 이루어져 명실공히 大學의 均衡 發展을 主導할 수 있는 支援機關으로서의 基金이 되어야 할 것이다. *